

핵협의그룹 신설·핵잠수함 전개...대통령실 “사실상 핵공유”

한미정상 '워싱턴 선언' 무슨 내용 담겼나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 마련에 초점
尹 “북핵에 대한 우려 많이 해소될 것”
한반도 핵 대응 한국 관여도 늘려

26일(현지시간)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워싱턴 선언'은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제도화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도를 높인다는 데 한미 정상이 뜻을 같이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으며 “사실상 미국과의 핵공유”라는 것이 대통령실 평가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첫 공동 합의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가 1년 가까이 확장억제 이슈와 관련해 협의해온 결과물이다.

무엇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양국 공조가 흔들림 없다는 정상 간의 지를 부각하는 의미가 크다. 70년 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체결된 워싱턴의 이름을 따 '워싱턴 선언'으로 명명됐다.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이 담겼다. 미국의 방위 약속이 선언적인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동반한다는 점을 보여줘 한국 내 안보 불안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정상 회담 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

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창설되는 NCG의 경우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운용 중인 '핵기획그룹'(NPG)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반도 관련 핵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도를 늘리고 한미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장구가 마련된 셈이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양국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도 단호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핵 공격 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언에서도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공격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미 정상은 다만 양국에서 최근 비등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 등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이 포함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미국을 국민 방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확장억제, 미국 본토 수준 보복 명시 동맹국 위협 억제

'워싱턴 선언' 용어 총정리

전략자산, 확장억제 구현 위한 수단

SSBN, 원자력 탄도미사일 잠수함

한국과 미국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면서 관련 용어의 의미가 주목받고 있다.

▲확장억제·핵우산=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2006년 10월 제38차 한미안보협의 회 공동성명에 명시되며 한국 안보에 처음 등장했다. 제3국이 핵무기 사용을 통해 미국의 동맹국을 위협하는 경우 미국이 체제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복할 의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즉 동맹

국 핵 공격을 받으면 본토가 공격받았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보복 응징 타격을 가한다는 개념이다. 그전에는 1978년 제11차 SCM부터 핵우산이라는 용어를 썼다. 핵무기가 가진 파괴력이 주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국이 핵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개념이다. 주로 한국·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 데 대한 보상 개념으로 적용됐다.

▲전략자산=전쟁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무기체계로,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확장억제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전략폭격기,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 수중에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 다른 대륙 목표물을 타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B-52H-B-1B-B-2가 미국의 현존 3대 전략폭격기로 꼽히며 스텔스 성능을 고도화한 미래형 디지털

전략폭격기B-21이 최근 공개됐다. 항공모함의 경우 미국은 11개 항모타격전단(CSG)을 운용하면서 세계 주요 지역에 배치한다. CSG는 함재기 90여 대를 싣는 항모 1척에 이지스 전투함정 3~4척, 잠수함 2척, 군수지원함 등으로 구성된다.

▲SSBN='원자력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으로, SS는 잠수함(Ship Submersible), B는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 N은 원자력(Nuclear)을 의미한다. 전략핵잠수함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SSBN이 탑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미국이 보유한 잠수함은 모두 원자력 추진 방식이다. 탄도미사일을 탑재하지 않는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은 SSN이라 부른다. SSBN은 향후 한국 기함이 예정됐다는 내용이 워싱턴 선언에 들어갔는데 미측은 SSBN의 한국 기함이 1980년대 초반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2%p 하락 32%

NBS 조사...부정평가 57%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57%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그대로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가 39%로 가장 높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 22%,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서' 10%,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해서' 8%, '통합하고 포용적이어서' 7%,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 4% 등 순이었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부정 평가 이유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가 36%로 가장 높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33%,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기용하여서' 9%, '정책 비전이 부족하여서' 8%, '통합, 협치의 노력이 부족해서' 6% 등이었다. '모름·무응답'은 2%였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 발언에 대해 '문제 있다'는 의견이 56%로, '문제 없다'는 의견(32%)보다 24%p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0%, 정의당 4%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2%p 내렸고 민주당은 2%p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34%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힘 교육위원들 민형배 교육위 제척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을 교육위에서 제척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교육위원 서병수 조경태 권은희 김병욱 정경희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당이 나서서 민

의원을 복당시켜 그동안 민 의원이 부정하고 강변했던 '위장 탈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교육위에서 즉각 제척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줬다"며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 즉각 다른 상임위로 옮겨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교육위 안전조정부회 강화 처리부터 교육위의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항상 '가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있었다"며 "민 의원의 거짓과 일탈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교육위 안전조정부에서 취임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시 '무소속' 민 의원은 안전조정부원으로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연합뉴스

국토의 입체화로 국민 안전과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트윈으로 리허설 중

LX 한국국토정보공사